

독일 경제는 가라앉는가

유재원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요약 》

2023년 독일은 주요 선진국들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금리인상으로 소비지출과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총수요가 감소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으로 발생한 부정적 총공급 충격의 여파 때문이다. 독일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향후 견실한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적신호이다. 독일이 저성장의 덩어리에서 벗어나려면 혁신과 구조조정, 대외 리스크관리, 그리고 고용기회 확대가 요구된다.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한국에게 독일의 경험은 타산지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본 연구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기침체 현황

독일은 세계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성숙하고 부강한 국가’로 주목받아왔다. 2차 세계 대전의 패전을 극복하고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1990년 통일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유럽경제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런데, COVID-19 사태이후 독일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고, 2023년에는 역(마이너스)성장까지 경험하였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로 미국과 일본의 주가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줄면서 총공급 측면에서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COVID-19 사태로 주요국들은 인플레이션율과 동시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독일의 경우 인플레이션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2019년 5.0%에서 2020년 5.9%로 증가하였다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3년에는 5.7%로 다소 높아졌다. 미국과 일본의 실업률이 2023년 말 각각 3.7%와 2.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표 1> 독일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 지표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GDP 성장률(%) | 1.1 | -3.8 | 3.2 | 1.8 | -0.3 | 0.8 | 1.2 |
| CPI증가율(%) | 1.5 | 0.5 | 3.1 | 7.9 | 5.9 | 3.1 | 2.2 |
| 실업률(20-64세, %) | 3.1 | 3.9 | 3.6 | 3.0 | 3.1 | 3.2 | 3.2 |
| 경상수지/GDP(%) | 8.2 | 7.1 | 7.7 | 4.2 | 6.0 | 6.5 | 6.5 |
| 일반정부 재정수지 | 1.5 | -4.3 | -3.6 | -2.5 | -2.2 | -1.6 | -1.3 |

주: * 잠정치, ** 전망치.

자료: 2019-2023는 Federal Statistical Office of Germany (www.destatis.de).
2024-2025는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 for Germany," 2023.11.15.

<표 1>은 독일 주요경제지표들의 추이 및 전망을 보여준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 -0.3%를 기록하고 2024년에도 0.8%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고금리 기조 하에서 내수가 위축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해외수요도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저조한 성장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미국과 일본은 각각 2.5% 및 2.0%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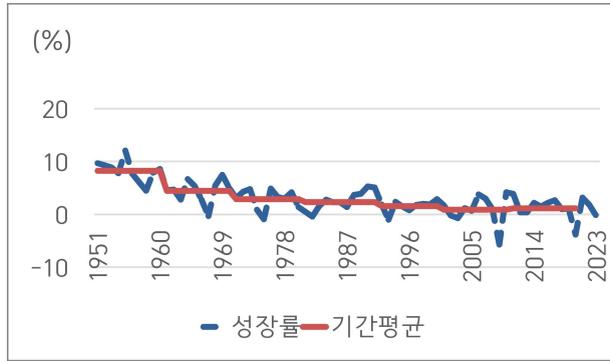
하지만, 2005년 통일의 혼란 속에서 11.0%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독일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023년 5.9%로 집계되었다. 2022년 6.9%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미국이 2022년 6.5%에서 2023년 3.4%로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도 물가상승률이 2023년에는 3.1%를 기록하여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지만 독일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러

흥미로운 점은 심각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견고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9년 8.2%에서 2022년 4.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 6.0%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독일의 GDP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19년 1.5% 흑자에서 2020년에는 4.3%의 적자를 기록하였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2.2%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¹⁾

1) 경기침체로 인한 조세수입감소를 감안한 경우 독일의 구조적 재정수지는 2020년 -2.9%,

독일의 경기침체가 길어지는 이유는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구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이 어려워진 점에 더하여 중국을 위시한 독일의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수출 물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더구나 경기침체의 여파로 건설업, 특히 주택건설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독일은 2025년에 가서야 성장률이 1.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European Commission 2023).



자료: Federal Statistical Office of Germany (www.destatis.de).

독일 성장률 저하의 원인과 전망

<꺼져가는 성장동력>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경제재건에 성공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대 연평균 성장률이 8.26%에 달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기적은 계속될 수 없다. 50년대 중반이후 성장률은 하락세로 돌아서서 1960년대 4.4%, 1970년대 2.9%, 1980년대 2.3%로 떨어졌다. 1990년 통일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다시 1.6%로 하락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2002-2003년 기간중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는 -5.7%의 역성장을 경험한 나머지 10년 평균 성장률은 0.9%에 불과하였다. 2010년대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연평균 성장률은 1.2%에 그쳤다. 경제자문위원회(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에 따르면 2020년대 잠재성장률은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독일의 경제성장률 추이 (1951-2023)

2021년 -3.0%, 2022년 -2.1%, 그리고 2023년 -2.4%로 집계되었다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23).

<총수요의 부족>

독일의 저성장은 총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내수와 해외수요 둘 다 저조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던 2011-2015년 기간을 보면 연평균 성장률은 1.68%를 기록하였는데, 소비, 정부지출 및 투자 기여도가 각각 0.72%와 0.32%, 그리고 0.2%를 기록하였다. 이들을 합한 내수의 기여도는 1.24%에 달하였고, 해외수요, 즉 순수출의 기여도는 0.48%를 그쳤다. 2016-2020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0.64%로 하락하였는데, 내수기여도는 1.06%에 머무른 반면, 해외수요기여도는 -0.42%로 크게 떨어졌다. 이 기간중 독일의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를 능가할 정도로 저조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23년 독일의 역성장은 내수와 해외수요 둘 다 부진하였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금리가 인하되면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이들의 성장기여도가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반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표 2> 참조).

독일의 성장률을 높이려면 내수와 수출이 둘 다 살아나야 한다. 하지만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소비와 투자 증대를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중국 리스크와 러시아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순수출의 증가도 쉽지 않을 것이다.

〈표 2〉 독일의 총수요 구성요소별 성장기여도

| 기간(연도) | 성장률 | 소비 | 정부지출 | 투자 | 수출 | 수입 |
|-----------|------|-------|-------|------|------|-------|
| 1992-1995 | 1.2 | 0.825 | 0.575 | 0.0 | 0.4 | -0.6 |
| 1996-2000 | 1.88 | 0.9 | 0.34 | 0.46 | 2.24 | -2.06 |
| 2001-2005 | 0.54 | 0.18 | 0.08 | -0.7 | 1.98 | -1.04 |
| 2006-2010 | 1.26 | 0.24 | 0.42 | 0.4 | 1.68 | -1.46 |
| 2011-2015 | 1.68 | 0.72 | 0.32 | 0.2 | 2.02 | -1.54 |
| 2016-2020 | 0.64 | 0.14 | 0.52 | 0.42 | 0.26 | -0.68 |
| 2021 | 3.2 | 0.8 | 0.7 | 0.9 | 4.2 | -3.4 |
| 2022 | 1.8 | 1.9 | 0.3 | 0.7 | 1.6 | -2.8 |
| 2023 | -0.3 | -0.4 | -0.4 | -0.1 | -0.9 | 1.5 |

자료: Federal Statistical Office of Germany (www.destatis.de)

〈총요소생산성 향상의 부진〉

독일의 성장률 저하의 원인을 총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1960년대이후 독일의 성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인용하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²⁾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을 합한 요소투입의 기여도는 1960-1975 기간 중 0.75에서 2005-2019 기간 중에는 1.09로 늘어났는데, 이는 노동투입증가에 기인하며, 자본투입증가는 2.16에서 0.23으로 크게 줄었다.

노동투입증가가 2005-2019년 기간중 이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것이 슈뢰더 총리가 2002년 구성한 하르츠위원회의 노동시장개혁 덕분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하르츠위원회는 당시 4백만명에 달하던 실업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임시직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소규모 소득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한편 실업급여를 줄이고 구직활동을 강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³⁾

2) Cette, Gilbert, Aurélien Devillard, and Vincenzo Spiezia. "Growth factors in developed countries: A 1960-2019 growth accounting decomposition," HAL, halshs-02958226. 2020.

3) 비정규직의 증가로 노동의 질이 하락하였다는 비판에 대해서 위원회측은 당장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저임금 일자리라도 구하는 게 낫다고 변명하였다.

결과적으로 2005년 11.0%에 달했던 실업률은 하향세로 반전되었다.⁴⁾

성숙한 경제는 요소투입에 의존한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그만큼 총요소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독일의 총요소생산성은 1960-1975년 기간중 2.93에서 2005-2019년 기간동안 0.42로 크게 줄었다. 눈에 띄는 것은 교육의 기여도가 거의 없고, 로봇화의 기여도가 0.02에서 0.32로 늘었다는 점이다.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는 교육과 로봇화만으로 대부분 설명된다.

〈표 3〉 독일의 성장요인분석

| 항 목 | 1960-1975 | 1975-1995 | 1995-2005 | 2005-2019 |
|--------|-----------|-----------|-----------|-----------|
| GDP 성장 | 3.68 | 2.47 | 1.20 | 1.52 |
| 노동투입증가 | -1.41 | -0.42 | -0.67 | 0.86 |
| 자본투입증가 | 2.16 | 0.96 | 0.80 | 0.23 |
| TFP | 2.93 | 1.93 | 1.06 | 0.42 |
| 교육 | 0.69 | 0.20 | 0.03 | 0.01 |
| 로봇화 | 0.02 | 0.15 | 0.53 | 0.32 |
| 잔차 | 2.22 | 1.58 | 0.50 | 0.09 |

자료: Cette, Devillard and Spiezia (2020)

4) 독일의 소득불평등도는 OECD 회원국 중 중간 정도이다. 세계은행 추계에 따르면 독일의 지니계수(최대값=100)은 2000년 28.8, 2010년 30.3, 그리고 2019년 31.7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제

독일이 저성장의 덩어리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명확하다. 총수요 측면에서는 내수와 해외수요를 진작하고, 총공급 측면에서는 요소투입감소를 상쇄할 만큼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내부는 물론 국제기구에서도 나름대로 진단을 내놓고 있다. OECD의 경우 생산물시장과 요소시장의 개혁, 디지털전환, 포용성 및 사회적 보호 강화, 기후전환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표 4> 참조). 그런데, 이러한 과제를 실행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고,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독일의 성장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이하에서는 한국도 비슷한 이유로 고민중인 몇 가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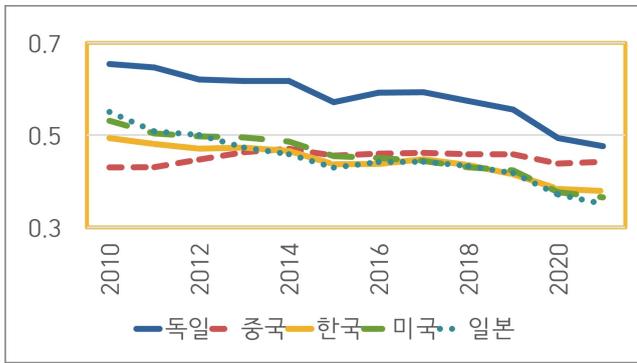
독일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또한 수출의 의존도가 높다. 그런데 COVID-19 이전부터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 자동차산업의 경우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화학이나 의약 부문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이 오랫동안 선두주자로 군림해 온 분야에서 혁신과 연구개발에 소홀히 한 결과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빠른 기술 및 효율성 변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표 3> 독일의 성장요인분석

| 정책과제 | 문제점 | 실행계획 |
|-----------------|--|--|
| 생산물시장과 요소시장 개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물시장과 요소시장 둘 다 효율성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물 시장: 규제 완화, 벤처기업에 대한 기관투자 강화 노동시장: 직업훈련 및 교육 강화, 노동시장 진입촉진 |
| 디지털 전환 촉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의 브로드밴드 접근도는 OECD전체 평균수준에 불과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 기업 비중은 여타 선진국보다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산업 기업연구개발촉진, 디지털서비스무역 규제 완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
| 포용성 및 사회적 보호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부족심화 여성노동력의 활용도 미약 교육에 따른 불평등도 심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교육 강화 부부합산소득 대상 인센티브강화 유아교육 강화 기초교육의 질 강화 |
| 기후전환 촉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45년 기후중립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배출 추가감축 필요 재생에너지 활용도의 획기적 제고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감소목표 강화 태양열 및 풍력발전시설촉진 시간가변형 전력망 요금제 도입 |

자료: OECD, Country Report 2023.

<그림 2> 주요국의 제조업경쟁력지수(CIP) 추이



자료: UNIDO Statistics Data portal,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CIP).

<그림 2>는 독일과 주요경쟁국의 제조업경쟁력(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CIP) 지수 추이를 보여준다. CIP 지수는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제조업 수출액, 중고위 기술군 제조업 비중 등 총 8개 항목에 대한 세부통계를 최대치가 1, 그리고 최저치가 0이 되도록 표준화 한 후 이를 종합한 것이다. 독일은 1990년대에는 일본과 선두를 다투었으나, 2000년이후 줄곧 1위를 차지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후발주자인 중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2021년의 경우 1위를 차지한 독일과 2위를 차지한 중국의 CIP지수는 각각 0.40과 0.37을 기록하였다. 더구나 독일의 경쟁력지수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쟁력지수는 국내외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의 격차가 조만간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⁵⁾

독일 통일 후 경제부진이 지속되고, 신흥시장경제와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00년대 초반 환경의 지속가능성,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2006년에는 기술, 혁신, 제조업 정책을 포괄하는 ‘하이테크 전략(High Tech Strategy: HTS)’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5) 한국의 CIP지수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1년 4위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보다 빠른 하향세속에서 2021년 8위를 기록하였다.

‘하이테크 전략 2020(2010)’ 및 ‘신하이테크 전략(2014)’ 등 하이테크 전략을 계속 내놓았다.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였는데, 독일재건은행(KfW)이 정책금융지원의 역할을 담당하여왔다.⁶⁾

그러나, 독일은 반도체나 AI 및 Big Data 등 첨단분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독일의 디지털 전환이 늦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특정 전략산업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기보다 독일은 R&D 관련 조세유인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외부경제가 존재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식이다. 따라서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첨단산업의 부상은 단기간에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독일이 경쟁력을 지속하려면 혁신체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개혁 및 관료주의 축소 및 투자관련 조세유인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⁷⁾ 낮은 투자율은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외국인투자를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가는 투자환경의 개선을 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대외 리스크의 관리>

독일경제는 주요 선진국중에서 가장 무역의존도가 높다.⁸⁾ 따라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감소는 중국의 경기침체의 타이기도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COVID-19으로 야기된 경기침체가 길어

6) 이재복·유지혜, “독일의 산업정책과 KfW의 역할,” 산은조사월보, 672호 2019, pp.3-33.

7) German Economic Experts Group, 2023.

8) 2021년 기준 OECD 주요국의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을 보면 스웨덴(103.0%)이 가장 높고, 독일(95.6%), 영국 (75.8%), 프랑스(70.6%), 일본(43.9%), 미국(33.6%) 순이다. 한국은 84.3%를 기록하여 독일보다 낮다.

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에너지가격의 급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은 중국 리스크와 러시아 리스크를 관리하고 독일의 국제분업구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 리스크: 중국은 2016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제1의 무역파트너로 부상하였다.⁹⁾ 독일은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도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 노력하여 왔지만, 미국의 압력을 외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독일정부는 중국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보증 한도 부과, 경쟁법 개정, 외국인 투자심사, 수출 제한 등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을 목표로 일방적인 무역제한조치를 취한 미국과는 결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기업들이 판매 및 조달 시장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에 노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독일이 진정으로 중국리스크를 줄이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과 수입선을 다변화하려는 체계적인 국가전략수립이 요구된다.¹⁰⁾

러시아 리스크: 독일은 자타가 인정하는 환경모범국으로 2016년 발효된 파리협약에서 합의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자발적으로 5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하였다.¹¹⁾ OECD가 제안한 배출감축목표 강화, 태양열 및 풍력발전 시설축진 및 시간가변형 전력망 요금제 도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기후전환은 단기적으로 독일의 에너지비용을 증가시켜 부정적인 총공급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크루그만 (Paul Krugman)은 러시아로부터의 가스수입 의존도가 높은 독일을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하고, 비용상승을 감내하고 수입선을 다른 국가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²⁾ 하지만, 러시아산 가스의 활용은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동방정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50%를 초과할 정도로 높다. 따라서 러시아산 가스수입이 30% 줄어든다면 독일의 GDP는 0.5%~3%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¹³⁾ 이는 무시할 만한 수준은 넘어서지만, 그렇다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정치적 공감대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분업구도의 재구성: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공급망의 다각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독일정부는 무역 및 투자보증을 통하여 제3국과의 파트너십, 특히 원자재 공급을 위한 장기협약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략적으로 유럽 생산능력을 증가시켜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주의 및 무역왜곡을 가져오는 보조금 정책에 대한 EU 차원의 공동대응도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¹⁴⁾

9) 2022년의 경우 중국은 독일은 제4위 수출파트너, 제1위의 수입파트너였다. 한편 미국은 제1의 수출파트너, 그리고 3위의 수입파트너였다.
10) KIEL 연구소(2023)는 중국과의 무역이 중단될 경우 독일의 GDP는 5%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COVID-19 팬데믹에 비견할 만한 수준이다.
11) 파리협약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최종 합의문으로 195개 회원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12) Paul Krugman, "Can Germany Break Up with Russian Gas?" New York Times, 2022. 3. 15., 그리고 "How Germany Became Putin's Enabler", New York Times, 2022.4.7. 참조
13) Karen Pittle, et al., "What if Germany is cut off from Russian energy?" VOX, 2022.
14) 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 *Competitiveness in times of Geopolitical change*, National Competitiveness Report 2022, 2022.

<고령화, 고용인센티브 강화 및 연금개혁>

독일은 2022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1%를 기록한 초고령사회이다. 65세 이상 인구를 20~64세 인구로 나눈 노년 부양비는 2022년 41.4%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 중 일본과 핀란드에 이어 가장 높은 편이다.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를 줄이고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독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인구의 노동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공적연금제도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고용인센티브 강화: 독일정부는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와 함께 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여왔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대응으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고용인센티브 강화 및 고용기회 창출을 위하여서는 고용과 사회보장 혜택간의 결합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간의 노동력 재배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노동력 부족을 자본으로 대체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를 활성화하여야 하는데, 당장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연금개혁: 독일정부는 고령화로 인하여 복지관련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여 왔다. 2000년대 초 독일 정부는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8%로 낮추기로 하였고, 공적연금 가입자가 감소할 상황에 대비하여 기존 수급자의 급여액도 하향조정하였다. 2007년에는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었고 보험료율을 18.9% 수준으로 올렸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연금개혁안이 실

행에 옮겨진 것이다.¹⁵⁾ 한편 독일 정부는 공적연금급여수준 하락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적연금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리스터연금(Riester-Rente)이라는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독일의 개인연금제도는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소득공제 이중혜택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낮은 가입률, 낮은 급여수준 및 제도의 불투명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다.¹⁶⁾ 여기에 더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및 자영업자를 위한 강제보험제도의 도입 등이 숙제로 남아 있다.

맺는말

독일이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의 잠재성장률은 0%대로 떨어졌다. 독일이 다시 지속적 성장궤도로 복귀하려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고령화에 따른 고용활성화 및 연금제도 개혁, 대외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빈곤 위험의 증대와 소득 양극화의 심화에 대처할 사회안전망의 정비가 필요하다.

독일은 한국과 인연이 깊다. 1960년대초 한국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차관을 들여왔다. 일본을 통해 들어온 독일의 제도와 정책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독일경제가 가라앉는다는 사실에 한국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한국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독일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SIES**

15) 한국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은 뜨거운 감자이다. 현행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2023년 11월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각각 소득보장강화(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안정화(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에 무게를 둔 두 가지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16) 보험연구원, “독일, 리스터연금제도 개혁 추진 동향,” 2023.

| 약력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Yale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경제발전학회장 및 한국
국제경제학회장을 역임하였다.